11월에 재정파탄 우려

박정희 선임연구원

-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재정고갈로 인해 이달 중 배분 예정이던 4조 엔 규모의 지방교부금 가운데 1조 4,000억 엔을 오는 10월 이후로 지급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.
  - 이날 아즈미 준 재무상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약 38조 엔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데도 야당의 반대로 인해 관련 법안이 묶여 있어 2012년도 예산집행을 부득이하게 억제한다고 공식 발표함.1)
    - 일본 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연기와 더불어 9~11월 예정된 행정상의 일반회계예산 지출도 연기한다는 입장임.
    - 한편, 일본 정부가 재원부족으로 예산집행을 억제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번이 처음임.
  - 38조 엔의 적자국채 발행은 올 회계연도 일본의 일반회계예산 90조 3,000억 엔 가운데 42%에 달하는 금액으로 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음 달에는 약 1조 엔 규모만 남게 됨.

- 한편, 이 같이 심각한 일본 정부의 자금난에도 각 부처에서 올라온 2013년도 예산 총액은 사상 최대 규모인 98조 엔에 달해 각 부처가 이런 비상사태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임.
  -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장비는 전년대비 8,400억 엔이 늘어난 30조 엔이며, 일본 정부는 고령화로 늘어난 사회보장 관련 비용 증가분의 재원 확보 방안에 고민하고 있음.
    - 또한, 내년도 국채비용도 24조 6,000억 엔으로 사회보장 관련 비용 다음으로 높아 예상 금리 2.2%를 현 상황을 감안해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힘.
  - 한편, 일부에서는 정부나 정치권에서의 재정파탄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지기 보다는 다음 달 중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적자국채 발행에 합의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하다는 여론임.

(산케이 外, 9/7)

1) 적자국채란 국가의 일반회계예산의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달 28일 여당 단독 처리로 하원을 통과했지만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참의원에서는 계속 계류 중에 있음.